

IMF 구제금융 8년의 평가

1. 검토배경

- 05.12.3일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합의서를 체결한지 8주년 되는 날
 - 한겨레 신문은 IMF 사태가 야기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05.12.1~3일간 “IMF 구제금융 8년 뭘 남겼나”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
 - IMF의 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해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잠재성장률 저하, 기업투자 위축, 외국자본의 금융지배, 주주자본주의 심화,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
 - 각각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및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드릴

2. 한겨레 기획기사가 지적하는 IMF 경제개혁의 공과

① 경제의 효율성 제고 vs. 잠재성장률 저하

- 功 : 관치경제 해소, 노동시장 유연화, 시장경제 기본원리 정착
- 過 : 단기실적주의로 인한 투자 위축, 투자자금 조달의 양극화, 고용불안, 소득 양극화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, 급격한 개방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

② 수익중시 경영 vs. 기업투자 위축

- 功 : 재벌의 문어발식 과잉투자 해소, 수익중시 경영 정착
 - 過 : 단기 실적주의 · 보수적 경영행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후퇴
- ⇒ 경제시스템이 ‘저위험 저수익’ 구조로 변화, 정부-은행-재벌의 위험 분담 시스템* 붕괴

*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연대에는 재벌의 과감한 투자를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지원해주고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전(예: 8.3조치, 중화학투자조정, 산업합리화조치 등 과거 3차례의 대규모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차입금 규모가 큰 재벌기업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음)

③ 금융건전성 제고 vs.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산업 지배

- 功 : 선진금융기법 전파, 지배구조 개선 및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에 기여
- 過 : 은행의 수익성 위주 영업 치중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(은행의 공공성 상실), 상장 폐지 등으로 정부·시장 감시 약화

④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vs. 주주자본주의 심화

- 功 : 재벌개혁, 투명성 강화, 수익중시 경영 정착
- 過 :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, 이익을 장기적 안목으로 재투자하기보다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환원, 안정적 경영에만 치중

⑤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vs. 양극화 심화

- 功 :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, 글로벌 경쟁체제 정착
- 過 : 정리해고 법제화·미국식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심화, 자영업 포화상태 야기,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약화

3. 구조개혁 부작용에 대한 검토의견

① 잠재성장률의 저하

-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, 외환위기 극복 및 시장경제 정착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
주요국 연대별 경제성장률 추이(%)

	'70년대	'80년대	'90년대	'00년대
미 국	3.3	3.1	3.1	2.4
독 일	3.2	1.9	3.3	0.9
프 랑 스	3.7	2.2	1.7	2.0
아 일 랜 드	4.7	3.1	7.1	6.2
일 본	5.2	3.7	1.7	1.4
영 국	2.4	2.4	2.1	2.4
한 국	16.3	8.6	5.8	4.6

- 투자부진이 최근 잠재성장률 둔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, 주 40시간 근무,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이 추세적으로 둔화된 것도 중요한 요인

- 잠재성장률은 관치경제에 의해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함
 - * 선진국중 예외적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일랜드의 경우 외국 자본 유치 등 유럽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으로 90년대 들어 8%대의 성장을 기록
- 참여정부는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중
 - 1)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개발,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, 혁신역량 강화와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등
 - 2) 덩어리 규제 정비, 토지이용규제 개선,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, 수도권 투자의 선별적 규제 개선 등
 - 3) 신용보증제도 개편,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
 - 4)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확립, 노사관계 법·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등
 - 5) 기업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6) 여성고용촉진 종합대책(9월) 및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(9월), 저출산·고령화 5개년 계획 수립(12월) 등 노동공급 확대정책 추진

② 기업투자 위축

- 최근의 투자부진은 보수적 경영행태 확산에도 원인이 있으나, 중국 경제의 부상, 수익모델 개발 미흡, 노동비용 등 투자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
- 또한,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IMF 이전과 같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 → 은행 대출 →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위험분담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이상 작동하기도 어려운 상황
 - 오늘날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영현실을 감안시 기업투자는 「민족적 애국심」이 아닌 「기업이윤에 입각한 합리적 의사결정」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
 - * 많은 기업이 국내투자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국 등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
-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·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

* 정부가 추진중인 투자활성화 관련 조치

-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추진 (05.11월 현재 총54개 중 30개 규제 개혁 방안 마련)
- 94년 이후 처음으로 05.11월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8개 업종의 공장 허용
-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위한 05.11월 토지이용규제법을 제정
-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(05.7월) 등 규제 개선
-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추진

③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산업 지배

○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긍정적 효과도 크므로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외국자본 유용성을 판단해야함

- 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입으로 금융·기업 구조조정의 신속 추진이 가능
-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리스크 중심의 책임경영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

○ 가계대출 위주*의 보수적 자산운용 등에 따른 은행의 공공성 훼손 및 상장폐지에 따른 시장의 감시기능 약화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으나,

*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: (99) 70.9% → (05.6월) 39.8%

-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형태*는 외환위기 이후 내·외국계 은행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노력, 대기업 및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방식 다양화**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

* 은행 원화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

: 56%(01년) → 52%(02년) → 52%(03년) → 50%(04년) → 49%(05.상)

** 제조업체 부채비율(한국은행) : 396.3%(97년) → 85.5%(05.상)

- 과거 은행이 정부의 산업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과도한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정책을 운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업대출 축소에 따라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정상화되는 측면도 있음

○ 또한, 상장여부는 당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상장유지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,

* 최대주주 지분율이 80%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해당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)

- 은행은 주주 외에도 예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3월 비상장은행의 공시기능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음

* 비상장은행의 수시공시항목을 3개에서 34개(외은지점은 20개)로 강화

- o 향후 내·외국계 은행 모두가 차별없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,

- 은행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* 및 국책은행을 통한 산업자본공급 강화 등을 통하여 대응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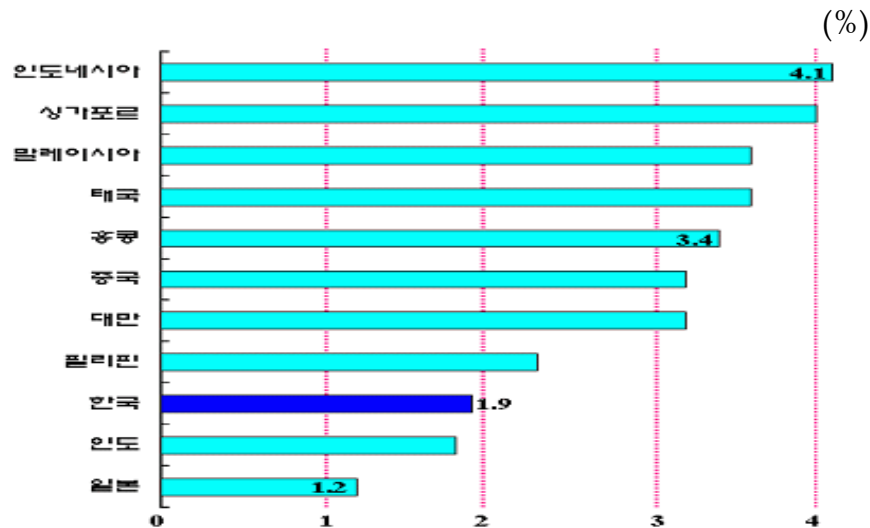
* 외국에서의 은행업 종사 경험, 향후 은행경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강화

④ 주주자본주의 심화

- o 주주자본주의 심화로 최근 배당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나, 우리나라의 배당수익률은 아직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임을 감안할 필요

* 한국기업의 2004년 배당수익률은 1.9%로 일본(1.2%), 인도(1.8%)에 이어 3번째로 낮음

2004년 아시아 국가의 배당수익률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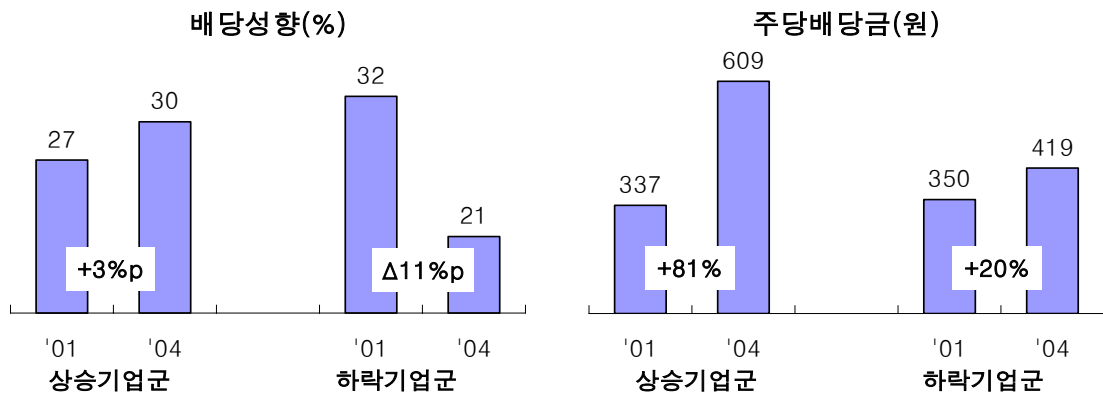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배당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

- o 외국자본이 압력을 행사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실증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

-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상장회사들(이하 상승기업군)의 배당성향(배당금/당기순이익) 및 주당배당금이 실제로 상승한 것은 사실

외국인 지분을 상승 및 하락 기업군¹⁾ 배당 비교



주 : 1) 2001년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5% 이상인 상장 제조업체중 3년간 지분율이 상승/하락한 30개 업체 기준

자료 : LG경제연구원

- 그러나 기업 펀더멘털에 충실하여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*

* 통계적으로도 외국인 지분비중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매출액증가율, 부채비율, 기초현금비율 등이 배당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(KIEP, '05년)

- o 기왕에 강화된 주주자본주의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며, 재벌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해법

5 양극화 심화

- o 경제양극화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, 경제구조적 원인,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
-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, 세계화의 진전, 기술진보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산업간·개인간 적응성 격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음
- 더불어 부품소재산업 미발달로 인한 수출-내수의 연관성 미약,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취약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과 같은 경기적 요인도 겹친 것으로서
- 경제양극화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결과라는 주장은 다소 극단적이며 명확한 이론적·실증적 증거도 의문

-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양극화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을 간과
 -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경직성, 해고비용 과다 등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기피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
- ⇒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,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필요
- 우리 경제의 낙후/취약 부문을 끌어올려 선도/혁신 부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
 - 성장선도 부문의 세계 일류화와 함께 부품소재,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
 -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해서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
 -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마련·추진